

I. 개요

1. 일시 : 2015. 8. 14. (15:30~18:00)
2. 장소 : 서울 포포인즈 호텔 남산 PDR 세미나실
3. 발표자 : 최지영 (한국은행), 최장호(KIEP)
이석기(산업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4. 참석자

임수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김영찬 (KIEP 통일국제협력팀 초청연구위원)
 임소정 (KIEP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최유정 (KIEP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홍석기 (KIEP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강주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종우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장)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배종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경덕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운 (극동대학교 국제개발대학원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교수)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지영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 제 목

- 북한의 산업 및 수출입 패턴과 통일 후 북한 지역 투자유치 방안
- 1) 북한 산업연관표의 추정과 활용 (한국은행 최지영)
- 2) 북한 무역과 북중 분업 체계 (KIEP 최장호)
- 3)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투자기회와 산업발전 방향 (산업연구원 이석기)
- 4) 통일 후 국토관리의 과제 (국토연구원 이상준)

II. 주요 논의 사항

[발표 1] 북한 산업연관표의 추정과 활용 (한국은행 최지영)

1) 발제내용

- 북한 I-O 테이블의 추정: 사회주의 국가들의 I-O 테이블과 북한 관련 기존 연구들을 참고, 2011년 북한 I-O테이블을 추정 및 평가 하였음
- 사회주의 국가들의 I-O 테이블은 폴란드(1956), 헝가리(1958), 소련(1961) 순으로 발표되었으며, 중국은 1976년에 공개됨.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였고, 공식적 I-O테이블은 공개된 적 없음
- 기존 I-O 테이블은 Firm level에서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신규 테이블은 기존 table의 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와 산업별 총 산출량(output)등을 이용하여 정보 개선
- 기존 연구들은 계획 경제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가정. Noland(2000)는 중국의 1979년 I-O 테이블을 바탕으로 북한의

96년 테이블을 추정하였고, Shin(2004)는 동독의 1987년 테이블을 바탕으로 추정한 바 있음

- 그러나 기존 두 연구는 중간투입률, 중간수요율 지표 모두 하나는 모든 산업에서 0.5이상, 다른 하나는 0.5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큰 격차가 발생. 따라서 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제 3의 국가를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제기

□ 경제 규모, 1인당 GDP, 산업 구성 등을 볼 때 베트남과 유사하다고 가정, 베트남 I-O 테이블을 기반으로 추정

- 중국, 동독, 소련 등은 경제규모, 1인당 GDP, 산업구성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 부적절
- 2000년대 초반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의 상황과 현재 북한이 유사하다고 생각
- 추정 방법은 CE entropy 최소 추정법을 사용
- 데이터는 2000년대 초반 OECD가 발표한 베트남 I-O테이블 계수를 Prior information으로 사용. GDP는 UN, 산업별 GDP 정보는 한국은행, 무역 통계는 KOTRA와 통일부 자료를 사용

□ 위의 추정에 기초한 생산유발계수 비교 결과, 현재 북한 경제는 1970년대 남한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됨

- 본 연구에서 추정된 생산유발계수는 광업 1.5, 경공업 2.7, 서비스 1.8 등으로, Noland(2000)보다는 높고 Shin(2004) 보다는 낮은 수준
- 생산유발계수를 직접생산과급효과, 간접 생산과급효과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 가능
- 광업, 전기/수도, 중공업 등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남한 1970년대 생산유발계수와 유사. 경공업 등만 1980년대 수준과 유사함
- 구체적으로는 석유화학, 타이어, 음식료품 등이 1970년대 초반, 화학비료와 시멘트 등이 1970년대 중반, 가전제품 등은 1970년대 후반 남한의 기술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북한 산업연관표는 대북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간 상호 의존관계 분석, 취업 유발효과, 이중경제 SAM 분석 등에 활용 가능

- 사회계정행렬 (IO를 확장, 경제주체들 간 거래 포함)의 승수분석을 통해 외생계정 변동의 유발효과를 분석. 사회계정행렬 항목을 세부화 하여 수출 증가 등에 의한 영향을 분석 가능
-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면 지역 간 교역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 가능하며, 지역 내 효과와 지역 간 효과를 구분 가능함. 현재 무역비중 측면에서 대중의존도는 상승하나, 수출확대로 인한 북한의 파급효과는 낮은 수준
- 산업별 취업자 수 (인구센서스 등)를 노동시간별 고용표로 전환, 취업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취업유발효과(계수) 분석 가능. 현재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반면, 취업유발의 의존도는 광업과 경공업이 높음
- I-O Framework내에서 가계 및 노동조사 결과를 이용하면 이중경제 SAM을 구성 가능. 이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 조세 정책 변화 등의 영향 분석

2) 토론 내용

□ BOK의 추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응답 (장형수 교수 외)

- BOK가 GDP를 추정할 때 남한의 몇 년도 데이터를 IO로 사용하는지 기준
- 접근방법이 좋음. 하나 이상의 기존 논문과 sensitivity check가 필요한데,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대답) 한국은행 GDP 산출팀은 매년 아닌 3-4년 데이터를 종합하여 사용했다고 하며, 남한 I-O를 통째로 적용한 것은 아님. 정확하게 몇 년도 기준인지는 밝힐 수 없음.
-

□ 베트남 2000년도 I-O 테이블의 사용 근거 (김영훈 박사 외)

- 베트남은 2000년이면 '도이모이 개혁'을 완료한 상황. 그러면 유발계수가 달라지지 않는지 고려 필요.
- '도이모이 개혁'은 실질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로 볼 수 있으므로, 90년 정도로 잡으면 좋을 듯.
- 또 계수가 연도, 발전 정도,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기존 연구에서 응용하면 좋을 듯.
- (대답) 베트남,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개도국 I-O를 이용하여 포괄적인 검토를 하겠음. 다른 개도국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전후 투입구조 효과도 반영 예정.

[발표 2] 북한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KIEP 최장호)

1) 발제내용

- 북한 무역 확대 정책으로 인한 북한 무역 추이 변화는 명목 가격으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UN comtrade 자료를 보면, 북한이 무역 확대 정책을 펼 2000년대 이후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
 - HS 코드 2단위에 해당하는 국제 물가지수로 deflate 하여 실질 가격으로 변환하면, 수출 수입 모두 크게 증가하지 않음. 순전히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임을 알 수 있음.
 - 10년 주기로 북한의 무역 확대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 가능.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90년대와 00년대는 수입만 확대되며, 10년 이후는 수입과 수출이 동반 확대됨.
 - 2010년 북한 무역 확대의 근거로는 중국의 FDI 증가, 북한의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무역 확대는 수입과 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점, 외부 경제의 대북 영향력 증대 등의 의미를 가짐
 - 수입, 수출 확대에 의한 경제성장의 장점은 주변국 특히 중국을

- 통해 산업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 그리고 식량 조달 가능
- 단점으로는 무역적자 누적과 자원 유출형 수출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광물자원 운반은 산업 성장에 악영향
- 외부 경제의 대북 영향력 증대는 주변국 경제 호황에 편승한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함
- 단점으로는 북한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됨. 이로 인해 시장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중력 모형을 사용하여 북한 무역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존 이론과 다른 결과를 보임. 수입과 수출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

-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생략된 관세 변수와 양자 제재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거리와 GDP등은 유의미하지 않음. 북한의 수입 관세자료 누락으로 인한 결과 왜곡, 북한 무역 특성 고려 결여, 북한 무역 결정 체계가 기존 경제이론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 등이 이 유가 될 것으로 보임
 - 수입 분석 결과 기존 이론과 불일치. 관세 변수가 포함될 경우 다른 변수가 거의 유의미해 지므로, 누락으로 인한 결과 왜곡 가능성
 - 수출은 비교적 일치함. 따라서 북한의 수입과 수출이 다른 결정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북한은 수출을 비교적 다양한 국가(중국에서도 산둥, 광둥, 허베이 성 등 다양)와 하지만, 수입은 특정 국가(중국, 특히 80% 이상이 랴오닝 성)와 하는 경향이 있음.
 - 대중 수입과 수출 목적지 역시 균형을 이루지 않음. 수출한 배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수입은 별개로 이루어 짐. 대중수출은 다양한 세관에서 이루어지나 대중수입은 동북 2성(랴오닝, 장춘)에 집중
-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중국 경기성장 둔화는 북한 경제 수출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며, 수입 역시 감소 추세이나 수출보다는 그 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북중 무역의 분업체계(Global Value Chain)는 소비의 경우 무역형태의 안정화를 보이는 '형성' 단계, 생산은 산업별 보완관계가 강화되는 '성장' 단계에 있다고 봄. 특이점은 중국이 북한에 위탁가공 하

- 는 양 보다 반대의 경우가 많고, 중국->북한 위탁가공 품목 중 상당수는 라오닝 성에도 풍부한 광물임
- 철광석은 국제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 물량 모두 감소 예측. 무연탄은 가격이 하락하나 물량은 현행 유지 내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에너지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요인. 의류와 수산물도 지속적 상승 예상
 - 수입은 동북 2성의 대북 수출 확대 노력, 무역통상구 정비 등 해당 지역의 정책 변화 영향. 그러나 외화벌이를 통해 수입 재원이 발생해 경기 하락에 따른 영향 폭이 감소함
 - 결국 수출은 관세와 양자제재의 영향이 중요하며, 수입은 기존 이론과 다른 결과를 보이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함.

2) 토론 내용

□ 사용된 데이터에 관한 의문점 (장형수 교수 외)

- 이 연구는 88년부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COMECON 붕괴 시기를 감안하면 88-92년 데이터를 같은 선상에서 고려할 수 없기에 대부분 연구가 92년부터 시작하고 있음.
- 2004년, 2009년 북한 데이터에 원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2009년 4달 데이터 없음), 또 실질 가격을 어떻게 잡았는지 의문.
- 2014년 실질 수준이 2011년 수준도 안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데이터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음. 다른 연구와 너무 배치되는 결과임. 심지어 한국은행 데이터와도 맞지 않음.
- (대답) 한국과 중국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전 데이터를 혼합하였으며, IMF의 world market index (5개 품목 가격)를 사용하여 deflate를 하였음. 남북경협 항목은 제외함.

□ 수출은 중국 경기 전체에 영향을 받고, 수입은 동북 3성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에 대한 근거 (정은이 교수 외)

- (대답) 수출항이 다양한 것은 주요 항목이 철광석/무연탄이라는 점. 육로운송보다 북한 남포항 등에서 운송하는 것이 비용상 저렴

하여 중국 남부로 이동.

- 석탄 등 운반 선박들의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규제 문제, 또 단둥 항이 개인 소유라는 점, 압록강에 크고 작은 항구가 200개 정도 존재한다는 사실 고려 필요.

□ 관세 데이터 분석 문제 (강주원 박사 외)

- 관세의 정의는 수입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부과하는 모든 것
- 평양에서 미국 수출 목적으로, 중국인 운영 하여 80만 벌 옷이 생산되는 사례가 있음. 중국 수출이 아닌 단둥 보세창고로 들어감. 통계엔 북중 무역으로 잡혀도 실질 주체는 미국 등 제3국인 경우. 즉 통계에 보세 창고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국 경기에 대입하는 것 과장일 수 있음.
- (대답) 2012-13년도 구입 예정인데, 여기엔 보세무역이 들어가 있음. 전체 중 제 3국으로 가는 건 대략 10% 정도로 추정 됨. 보세로 신고 여부는 관세 문제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임.

□ 중국 각 성의 수요가 실질적 수요인지 여부 (이정덕 과장 외)

- 해당 세관 신고 시 그 성이 실질 수요처가 맞음. 대련-> 천진 수속이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함. 중국법상 넘어가는 게 더 힘들
- 수입 무연탄이 항구에서 600km 이상 이동 금지 법안이 발효되었음. 운송비 비중이 크므로 대부분 연안지역에서 수입. 내륙성들은 자체 탄광도 보유 중
- 그러나 수입에 대한 결론은 그냥 집결지일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발표 3]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투자기회와 산업발전 방향 (산업연구원 이석기)

1) 발제내용

- 통일에 따른 경제적 영향 논의에는 통일 경로 및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 방식과 속도를 고려해야 함
 - 급진적 통일 가정 시, 경제통합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제도 및 시장이 통합되거나, 통일 로드맵 합의 이후 일시적으로 분리 운영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1)북한지역이 신속하게, 비가역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 2)통일 후 남북한 간 일정 기간 동안 상당 수준 임금 격차 존재 의 두 가지 가정을 함
 - 따라서 짧은 과도기를 제외하면 북한에 시장 경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북한 지역의 임금 상승 속도를 제어할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통일의 시너지 효과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변영, 새로운 경제권의 형성 및 투자 잠재력 상승, 새로운 노동력 풀 형성 등임
 - TKR과 TCR/TSR의 연결, 남북중단 고속도로, 동북아 송유관 건설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따른 동북아 수송 및 에너지 협력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
 -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지정학적 위치, 지하자원 등의 결합으로 강력한 성장 잠재력 확보. 급속한 경제 성장은 남북 소득 격차 축소 및 북한지역의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북한지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성장한다면 유망한 투자 지역으로 부상함. 인프라의 전면적 재건 및 확충 위한 투자가 필요
 - 북한은 교육 수준이 높아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높은 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고령화에 따라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 풀을 활용 가능케 함

- 남북 간 산업 재배치 및 분업구조 구축을 통해 노동 집약적인 산업부문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IT의 발전 및 자본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
 - 노동력 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 섬유·의류 등 경공업, 전기전자 등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북한지역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
 - 북한이 대대적으로 육성한 소프트웨어 인력과 남한의 IT 제조업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
 - 북한의 재건과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기계, 소재, 부품 등 자본재 산업의 수요 증가. 철강·기계 등은 북한이 생산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산업 육성 잠재력이 크며, 낙후된 화학·수송기계 등은 남한과 분업구조 형성 가능
 - 인프라의 경우 애초부터 최신 기술에 기반을 둔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기회 및 산업단지 건설이 가능함
- 통일 전후 북한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재정이나 공공부문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 즉 산업단지 개발 및 고용창출, 기술 산업 육성 등이 있음
 - 정부는 산업이나 설비의 구조조정 및 현대화에 직접 개입 보다는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
 - 통일 초기엔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위해 노동 공급이 용이한 평양, 남포, 신의주, 함흥, 청진 등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 개발이 효과적
 - 내륙 지역 군수중심 단지는 청산하는 등 기존 중화학공업 지구의 선택적 정비 및 현대화 필요. 접경지대인 나진선봉이나 신의주는 초국경적 협력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 중소기업 부문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사유화, 소프트웨어 인력을 이용한 테크노 밸리등 새로운 기술 산업 육성이 요구됨. 특히 대도시에 기술교육 센터 설립 운영, 북한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지급 등 고용창출이 실업 해결과 연관되어 가장 중요

[발표 4] 통일 후 국토관리의 과제 (국토연구원 이상준)

1) 발제내용

□ 북한의 국토 실태

- 우리는 토지의 사적 소유 및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 계획 및 개발 체계를 갖고 있으나 북한은 토지의 국가소유가 원칙
-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60%, 우리는 100%로 큰 격차를 보임
- 북한은 철도중심, 우리는 도로 중심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북한의 항만 하역 능력 역시 남한의 1/29 수준. 이는 체제의 특징을 반영한 차이임
- 북한은 수력중심, 우리는 화력 중심의 전력생산체계가 구축됨

□ 독일 통일의 사례

- 독일은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통일교통프로젝트' 등 인프라 개발을 추진함. 2003년 까지의 전체 통일비용의 50%가 소요되었으며, 2019년까지 1560억 유로 추가 투입 예정
- 동독지역 인구유출의 주원인 중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지역 정비, 지역 경쟁력 강화 위해 지역경제성장 지원 프로그램 (GRW program)등 정부정책 추진
- 통일 이후 동독지역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토 경쟁력 및 생활환경이 개선됨. 그러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문제 발생
- 따라서 국토건설에 있어 과잉계획과 중복투자를 경계하고,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며, 사전 교통부문 협력과 국토 균형발전 계획 필요

□ 통일 이후 국토관리 핵심 과제

- 북한지역 도시 및 산업입지 개발, 통합인프라 창출, 환경자원 관리 등을 통해 통합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구도 구축이 요구됨
-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함흥 등 중공업 도시 인구 축소, 평양, 남포, 신의주, 나선 원상 등 5대 신 성장거점 중심의 도시체계 재편

- TKR, TCR, 파이프라인 등 주변국과의 연계, 도로, 송배전망, 통신망 구축 등 남북한 연계를 병행 추진. 북한 내 개발은 5대 신 성장거점 우선 개발 후 주변지역과 연계
- 수자원의 경우 다목적댐, 저수지, 지하수 등 유역별 용수공급원을 고려한 광역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의 하천 정비경험을 토대로 압록강·두만강 등 7대 하천의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

□ 현 시점의 준비과제

- 대북 물자수송망 긴급 복구 대책, 북한주민 주거 안정 대책, 국토 관련 제도적 통합, 통일수도 결정 등 착수해야 할 과제 발굴
- 북한의 국토 및 도시 지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으로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수립에 활용 시급.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과제 준비 중임
- 북한 뿐 아니라 세계화, 녹색성장, 초국경 협력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새로운 한반도 국토경영전략(국토개발마스터 플랜)이 필요

2) 토론 내용 (발표 3,4 통합)

□ 통일 대비 국가전략 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동용승 박사 외)

- 현재 북한 연구는 세계적 변화 조류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이에 따라 포지셔닝이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라 통일 전략이 달라져야 함.
- 기존 가정은 북한이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기지 역할 할 것이라고 접근했으나, 이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 세계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마스터 플랜 검토해야
- 급속한 성장과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중국의 경제적 변화, 단순히 동북아 인프라 연결을 넘어선 지역적 협력 등을 고려해서 통일 한국의 국가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세계 산업 변화를 고려하여 유선통신, 일반철도 설치 등에 대한 현재 우선순위 설정을 재고할 필요

□ 제조업 기지로서의 북한의 역할과 전망 (안병민 박사 외)

- 중국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래 한반도는 제조업 기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음. 통일 이후 미래에 제조업 기지로서의 북한의 역할이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대답)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국가들처럼 금융, 관광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음. 또한 통일 후 10년 이렇게 일정 정도 기간까지만 고려해야 하고, 그 이후는 지역 문제로 전환됨. 통일이 100년 후가 아닌 가시권에 있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제조업은 유효하다고 생각.
- 비교우위에 따라 북한이 제조업, 경공업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의 전제는 북한의 임금 수준 유지임. 경제적으로 임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 존재하는지 의문. 또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과 연계되어야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 국가가 특정 반드시 육성할 필요는 없음. 통일 후 정부가 참여해야 할 부분은 향후 경제전망, 공공 인프라 제공, 그리고 복지수준 결정이라고 생각함.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원하긴 하나, 국가의 오판 확률이 높으므로 시장이 주도해야.